

## 동아시아 근대와 일본의 대응

### East Asia Modern and Countermeasure of Japan

이명원 \_경희대학교

Lee, Myung Won \_Kyung Hee University

#### 초록

이 논문은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시작된 일본의 근대를 역사적 전개과정에 따른 정치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메이지의 일본은 헌법제정 과정에서 일본적 정체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운동이 자유민권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지만, 헌법 제정의 결과 천황 대권주의가 오히려 공고화된다.

물론 천황기관설 논쟁이라든가 민본주의와 같은 민주정의 해석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일시 분출한 것은 사실이고,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과정 속에서 의회정치와 선거권 운동을 통해 근대 입헌주의의 민주정의로의 전환이 추구된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운동은 모두 실패한다.

민주주의의 실패는 일본의 천황제 강화와 전쟁을 통한 제국주의식민주의 확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1940년에 이르러서는 태평양전쟁의 개전과 패전을 맞게 된다. 일본적 근대는 물질적기술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서구적 근대성을 적극적으로 모방·채용하지만, 정치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제 말기의 천황제 파시즘으로 귀결된다.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국제협조주의를 간과하고, 동양열시/서구선망으로 돌진했던 동아시아적 근대의 한 특수한 역사적 형태가 일본적 근대라고 볼 수 있다.

□ 주제어: 자유민권운동, 다이쇼 데모크라시, 입헌주의, 천황제 파시즘, 아시아적 근대

####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was written in Modern Japan from the Meiji Restoration began in the political center of the historic events of historical evolution.

Meiji Japan , but is deployed in the form of the Japanese enemy with a variety of congestion civil rights movement is freedom and democracy in the relevant

constitutional process, the results of the enacted constitutional prerogative the emperor attention, but rather consolidated.

Of course, the transition to the Emperor's status debate and populism attention citizen for political democrac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such democracy aspiration and Taisho Democracy of modern constitutionalism through parliamentary politics are fail.

Failure by the imperialist war of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and advance to the colonial expansion, is for the war and the defeat of the Pacific War until the 1940. Japanese modernity is material and technological. The institutional actively imitate Western modernity, but by excluding the political level, democracy, and consequently result in the end of the Japanese Imperial system of fascism.

Overlooked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East Asian region and democracy, and has a specific historical form of contempt Oriental / Asian modernity was rushed to the West envy can see that Japanese modernity.

- Key words: Freedom Civil Rights Movement, Taisho Democracy, Constitutionalism, Imperial System Of Fascism, Asian Modernity

## I. 메이지 유신과 자유민권운동

페리제독의 흑선과 함포외교에 따라 일본이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까지 지배했던 도쿠가와(德川) 막부는 250년간 쇄국정책을 유지했다. 대중국 무역은 류큐왕국의 대중(對中) 무역을 수탈하는 것으로, 서구와의 교역은 나가사키(長崎) 항을 개항하되 네덜란드와의 제한적 무역만으로 한정했다. 도쿠가와 막부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지방의 통치자인 다이묘(大名)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으며, 대외무역과 서구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이러한 쇄국 속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표면적 안정은 정국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속한 격변에 직면하게 된다. 내부적으로는 도쿠가와 막부의 통치체제 아래서 소외된 지역 번주(藩主)들에 의한 불복종 및 반란 위협이 심화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의 발달에 따라 동양으로 눈을 돌린 서구의 개항요구가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쿠가와 막부가 위기를 실감하게 되는 것은 조공-책봉 시스템을 통해 동아시아적 정치-교역 시스템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서구에 대해서는 쇄국정책을 펼쳤던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전쟁(1840-1842)에서 패배한 것을 목격한 이후다.

영국과의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한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중국 중심의 천하체제(조공-책봉 시스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서구로부터 비롯된 충격이 이후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서 쇄국정책을 강화하느냐, 개항을 통한 근대화를 추진하느냐 하는 시대적인 논란을 가중시키게 하였다.

도쿠가와 막부는 애초에 쇄국정책을 통한 통치권의 보존을 시도했으나, 서구의 개항요구에 무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후 확인하게 된다. 페리가 물고 온 함선을 당시의 일본인들은 구로후네(黒船)라 불렀는데, 이것의 출현이 막부와 민중들에게 끼친 공포는 대단한 것이었다. 도쿠가와 막부에 개항을 요구한 페리제독의 함대는 함포외교를 통해 1854년 ‘가나가와(神奈川) 조약’으로 불리는 마일 친선조약과 후속조약인 시모다(下田)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으로 이를 기점으로 막부를 정점으로 한 일본의 막번체제는 붕괴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sup>1)</sup>

페리와의 불평등조약 이후 일본이라는 국가의 목표는 압도적인 서구열강과의 대치 속에서 어떻게든 정치적 독립을 수호하고, 사회를 서양화·근대화함으로써, 구미열강을 따라잡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변용되었다.<sup>2)</sup> 이것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메이지(明治)유신(1868)이라고 볼 수 있다.

메이지 유신은 명목상의 권위에 불과했던 천황(天皇)에게 실질적인 주권을 부여하고, 막번 체제에 입각한 무인지배가 지속되어왔던 중세 일본을 근대 국민국가로 전환시키기 위한 위로부터의 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천황주권의 국민국가가 일단 성립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정치세력 간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의 민중들 역시 다양한 국가전망을 모색했다. 메이지유신이 진행되는 과정

1) 맥세게사 편찬위원회, 『일본사』 (고양: 느낌이있는책, 2015), 29-32.

2) 大野建一·坂野潤治, 『메이지유신 1858-1881』 (東京: 株式會社 講談社, 2010), 18.

속에서의 일본의 정치가와 민중들은 한편에서는 부국(富國)과 강병(強兵)을 중심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부국강병’ 세력과 의회(議會)와 헌법(憲法) 제정을 중심으로 서구적 입헌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는 세력들인 공의여론(公議輿論) 파가 경합하고 충돌했다.<sup>3)</sup> 이것을 단순화하면 국권파와 민권파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표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적 내셔널리즘의 구성·강화를 통한 국민의식의 강조는 이 두 세력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형태였다고 규정할 수 있다.

부국강병파는 서구적 근대의 핵심이 산업의 진흥과 근대화에 있다고 보았다.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 노선의 대표적인 인물은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이었는데, 이들은 1871년 이와쿠라 사절단(岩倉使節團)을 수행하여 서구의 정치와 산업화 상황을 시찰한 후 충격을 받았다. 오쿠보의 경우는 일본의 산업화를 진흥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식산흥업 정책을 강조한 반면, 기도는 독일식의 군주권력을 강화하는 천황친정의 ‘독재의 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sup>4)</sup> 후발 근대화를 추구하는 일본이 독일의 정치체제와 산업화 노선에서 단서를 얻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이었을 것이다.

반면, 공의여론파는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를 중심으로 민선의원(民選議院)을 설립할 것을 건의한다. 1874년 1월에 메이지 신정부에 제출한 「민선의원설립건백서(建白書)」를 기화로 이른바 국회개설운동으로 이어지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다.<sup>5)</sup> 일본에서의 자유민권운동은 피치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국가의 존재방식을 논의하고 그 실현을 위해 행동했던 획기적인 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sup>6)</sup> 자유민권운동을 통해서, 종래의 신분제질서는 폐지되고, 토지개혁을 통한 농민적 삶의 개선이 주장되었으며, 정치참가운동을 통해 일본적 국민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모든 초기의 정치운동이 그렇지만, 일본에서의 자유민권운동 역시 ‘계몽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문명개화의 표어는 민권운동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3) 大野建一·坂野潤治, 위의 책, 23.

4) 大野建一·坂野潤治, 위의 책, 52-53.

5) 위의 책, 64.

6) 牧原憲夫, 『民權と憲法』(東京: 岩波書店, 2006), v.

모토가 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운동의 토대가 되는 여러 형태의 사족(士族) 결사체가 형성되었고,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문이 창간되어 지식인과 저널리스트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연설회 등을 통한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과 계몽, 이에 따른 정부에의 청원활동 역시 활발해졌는데, 특히 이 시기의 경제적 빈궁 상황은 민중들로 하여금 여러 형태의 집단적 항의운동을 촉발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정부는 민중들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자유민권운동을 역설했던 자유민권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역시 강화하는 등의 강권적·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화했다.

자유민권운동이 고양되는 과정 속에서, 또 부국강병 노선이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의 일본의 양상을 보면 그 안에 이후 전개되게 되는 일본적 모순의 기본형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부국강병 노선이건 자유민권 노선이건, 그것이 서구의 위협이라는 당대 일본의 맥락 속에서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강화시키고, 이에 따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을 일본이라는 내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연적인 것으로 승인하는 형태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정부는 홋카이도 개척(1869), 류큐병합(1872), 타이완 출병(1874) 등을 통해 지속적인 대외확장 정책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심화되었던 경제난에 대한 민중들의 항의와 자유민권에의 정치적 요구를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로 변용시킨다. 이후 청일전쟁(1884)과 러일전쟁(1905)을 통해 조선을 식민화하는 것 역시 이러한 식민주의에 기반한 내셔널리즘의 연장이었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변모다. 그는 계몽활동의 초기에는 서구의 동아시아 침략을 막자며 아시아 연대론을 펼치지만, 이후에는 ‘탈아입구(脫亞入歐)’ 노선을 통한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문명화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침략노선을 정당화하게 된다. 그러나 후쿠자와의 논의를 살펴보면, 일관되게 그 자신이 일찍부터 국민의식=내셔널리즘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학문을 권장함』을 통해서 과거 막번 체제하의 민중들은 신분제적 질서 아래서의 노예의식(客分)에 종속되어 있었고, 오직 그가 섬기는 주인(主人)에 대한 복종만을 염려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메이

지 신정부가 성립되고 민중 자신이 주인이 된 이상 국민 의식과 애국심은 필연적인 것이라 말한다. 그래야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라는 의식을 비로소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역설했다.<sup>7)</sup> 요컨대 정치적 평등은 국민적 의무와 책임의 평등을 의미하며, 그것은 일본인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의 기반 아래 있다는 것이 후쿠자와의 생각이었다.

자유민권 운동의 과정 속에서 민권파와 민중들의 정치적 의사가 강력하게 표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정치적법적으로 수용되지 못했고 도리어 국가에 의한 무력적 탄압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다. 자유민권투쟁의 결과로서 성립된 일본의 제국헌법(1889) 역시 ‘입헌주의’ 국가로의 상징적 출발을 의미하긴 하지만, 천황을 만세일성(萬世一姓)의 신성한 존재이자, 주권의 담지자이자 국가를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보면, 흡사 유럽의 절대왕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입법, 군사통솔권, 재정, 외교권 등 국가업무의 모든 결정권은 천황에게 집중되었고, 국민의 권리는 제한적이어서 신민(臣民)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되었다. 평민의회인 중의원의 설치를 헌법은 허용했지만 그 권한은 사실상 미미한 것이어서, 일본의 입헌군주제란 실질적으로 천황제 절대주의로 귀결되었다<sup>8)</sup>.

## II. 제국헌법과 교육칙어의 반포

전전(戰前) 일본에서의 입헌정치와 시민계층의 출현이 차단되고 천황주권론에 입각한 절대주의 체제가 지속된 것의 핵심적인 근거는 대일본제국헌법(이하, 제국헌법으로 약칭. 1889)의 존재였다. 애초에 헌법제정 운동이 자유민권파에 의해 제기될 때 그것의 핵심내용은 사족들뿐만 아니라 신분제 철폐를 통해 자유로운 존재가 된 평민들이 정치과정에 개입하고 이를 통해 대의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이 존재했다.

7) 牧原憲夫, 위의 책, 21.

8) 맥세게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

그러나 일본제국 헌법을 제정하는 데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던 초대 일본 내각총리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같은 근황주의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1882년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조사단으로 유럽을 방문하여 18개월 간 체재하였다. 이토는 제국헌법의 모델을 군주국인 독일, 정확하게는 프로이센에서 찾았다. 그는 가령 입헌군주제 아래서도 시민정부론을 채용했던 영국의 의회정치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조직의 완전한 단결을 통해 땅의 크기와 인구의 왜소함을 보상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sup>9)</sup> 물론 조직의 완전한 단결을 가능케 하는 것은 천황이라는 생각이 여기에는 담겨 있었다. 다분히 서세동점의 위기의식의 산물이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식은 민권파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그가 격렬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비밀리에 작성하고 반포한 헌법초안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천황 절대주의 체제를 여러 지점에서 드러낸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결과로서 천황에게는 선전포고, 조약체결, 군 통수권 등을 포함한 많은 권한이 약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천황은 통괄적인 포고권을 가졌고, 국회를 자유로이 연기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회는 새로운 조세를 부정할 수 있는 권한 이상의 통제력을 갖지 못했다. 이것은 향후 몇 년 동안 보였듯이 내각을 괴롭히는 강력한 무기일 수 있었지만 국회로 하여금 국가 정책에 관한 통제력을 갖게 해주는 충분한 지렛대가 되지는 못하였다.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중의원(衆議院)이 국회의 결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치 않았다. 결국 귀족원(貴族院)이 그것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고, 귀족원 의원은 세습 임명으로 자연스럽게 메이지 체제를 유지하였다.<sup>10)</sup>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제국헌법에서의 천황은 국가 자체다. 의회의 기능은 구 변별 귀족 출신인 귀족원이 장악하고 있고, 평민의회라 할 수 있는 중의원의

9) W. G. 비즐리, 장인성 역, 『일본 근현대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4), 136.

10) 위의 책, 136-137.

권한은 미약하다. 천황이 절대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국민들은 신민(臣民)이라는 봉건적 정체성으로 환원되었다. 메이지 유신은 명목상의 지위에 있는 천황을 주권의 절대적 담지자로 옹립한 왕정복고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메이지 신정부의 성격이 18세기 유럽의 절대왕정에 유사한 것인지, 근대적 입헌주의에 가까운 것인지가 헌법의 성립과정에서부터 논점이 되었다.

제국헌법 제1조는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고 규정, 천황대권(大權)을 명확히 했으며, 제정 과정 전반을 보면 이것은 국민의 의사와 관련이 없이 군주의 단독의사에 의해 만들어진 흥정헌법(欽定憲法)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sup>11)</sup>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 헌법의 제정을 통해 절대화된 것은 천황의 주권과 의지였으며, 근대일본의 국민적 공동성을 구축하는 일 역시 만세일계의 천황에 대한 충성과 신민들의 절대적 복종이 강조되었다.

일본제국 헌법 아래서 천황은 가히 절대적 존재였다. 군대에 통수편제, 선전포고 및 강화, 조약체결 등의 결정은 전적으로 천황에게 속한 것이었다. 천황주권은 무력의 독점을 통해서도 강화되는 것이겠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장구한 무가 지배체제 속에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이 사실상 부재했던 국민들에 대한 해계모니적 통치 역시 긴급한 것이었다. 중세의 일본의 무사나 민중들은 그들이 속해 있던 번(藩)의 수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했지만, 광역적인 봉건적 통치권력으로서의 막부나 교토에 은둔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심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제국헌법을 통해서 천황주권 또는 천황대권론을 국민적 통합의 핵심적 근거로 삼고, 이를 통해 일본적 국민의식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력의 독점을 통한 위로부터의 강제 뿐만 아니라, 동의에 의한 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강화, 즉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의 지속적인 내면화와 국민적 주체형성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두 차원에서 이러한 천황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국민적 주체형성이 시도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11) 木原憲夫, 『民權と憲法』(東京: 岩波書店, 2006), 189.

첫째, 상비군 체제의 확립과 천황의 군대 육성이 그 하나다. 메이지 유신 이전의 막번 체제 하에서는 무력이 각각의 번별로 독립적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각 지방의 무사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번의 수장에게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지만, 중앙권력인 막부나 상징적 지위에 있었던 천황에 대한 복종심은 대체로 미약했다. 때문에 메이지 신국가가 일단 성립되었다고 해도, 그 즉시 천황에 대한 사족 계급들의 충성심이 가능해졌다고고는 볼 수 없다. 반대로 메이지 신정부의 출현은 그동안 신분제 질서 하에서 특권계급으로 존속했던 사족(士族)들의 독자적 군사력은 물론 정치경제적 토대를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메이지 유신에 참가한 당사자였던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쓰마 번이 정부군과 격돌했던 서남전쟁(1877)의 원인 역시, 이면에는 사족 계급의 급격한 몰락이라는 엄중한 현실이 숨어 있다.

이에 메이지 신정부는 구 사족계층의 반발을 귀족원이라는 세습적 입헌정치 장치 안에 수렴시켜 사회경제적 특권을 제한적으로 보존해 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국민개병제로서의 징병제(1872)를 실시해 군사력의 중앙집중화를 시도했다. 특히 징병제의 실시는 인구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평민들로 하여금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훈육적 장치를 통해 내면화시키는 또 하나의 교육장치였다.

칙령의 형태로 반포된 군인칙유(1882)는 이를 잘 보여준다. 군인칙유는 1945년 패전까지 일본의 군국주의를 내면화한 장치였다. “의는 산악보다도 무겁고 죽음은 깃털보다도 가볍다고 각오하라”는 표현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경시되는데, 이 칙유에서의 천황은 “짐은 너희들 군인의 대원수다”라고 선언된다.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천황은 군인은 물론 일본의 국민들에게 스스로를 대원수로 간주하게끔 만드는 의례와 발언을 계속했다. 그는 평시에도 일본 육군 군복을 착용하고 모든 의례에 참가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군복 입은 천황의 모습을 게재함으로써, 천황은 모든 국민의 대원수라는 군국주의적 천황표상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게 되었으며, 이는 대원수 천황에 대한 절대적인 신민(臣民)으로서의 충성심을 내면화시키게 되었다.<sup>12)</sup>

둘째, 천황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 가장

12) 山住正己, 『日本教育小史』(東京: 岩波書店, 1987), 40.

명확하게 강조되는 것은 교육이다. 1890년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교육칙어가 반포되었다. 헌법이 반포된 이후 문부성은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메이지 천황 자신이 일본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기록할 것을 제창했고, 특히 수신(修身) 과목의 경우는 문부성이 직접 교과서를 편찬해 덕육(德育)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교과서 제도 역시도 검정제로 시행하되, 교육의 핵심은 교육칙어의 가치에 순응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칙어는 그 내용에 있어 유교적 가치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육의 근본이란 황조황종(皇祖皇宗)의 유훈(遺訓)을 받드는데 있다는 것이었다. 즉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기록된 천황제의 연속성 아래 신민(臣民)들은 천황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메이지기에 확립된 국민교육의 본질이 신민교육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칙어나 교육칙어는 천황대권에 기반한 명령의 형태로 반포되었다. 이것은 천황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심의는 필요 없었다.<sup>13)</sup>

헌법 제정 이후 메이지기의 일본인들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칙어로, 군복무 과정에서는 군인칙어에서 강조되는 천황에 대한 복종과 충성이라는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결국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형성했다. 천황제에 기반한 국가주의와 군국주의가 이 두 가지 칙령에 의하여 공적 세계로부터 일상은 물론 개인의 내면의 통제에 까지 제도화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천황제 근대국가가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이후 일본 내부에서 민본주의나 사회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요구가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절되거나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침략으로 그 에너지가 전환되는 식의 부정적 양태로 나타나게 된다.

### Ⅲ.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실패

메이지기의 일본은 천황주권론을 기반으로 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이 있었다. 부국강경파와 공의여론파가 적절한 균형을 취할 수 있었다면, 이후의 식민주의제국주의 노선으로의 강경한 경향성은 제어될 가능성이 얼마간 있었다.

13) 山住正己, 위의 책, 58.

그러나 자유민권운동의 좌절 이후 일본의 국권파들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방어하고 주권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했다. 후쿠자와 유키치 식으로 그것은 일종의 문명론의 성격을 띠면서 정당화된 것인데, 종래의 중국은 지나로 격하되고 조선은 지나의 속국적 지위로 간주하면서, 중국과 조선에 대한 침략을 문명화의 사명으로 치환시켰던 것이다.

러일전쟁(1904-1905)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지배계급에서 기획된 일본적 내셔널리즘을 민중들에게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국민교육과 징병제의 실시에 따라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한 일본의 민중들은 러일전쟁기가 되면 ‘제국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국가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동시에 서구열강에 대한 배외주의는 물론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멸시의 시각 역시 고조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제 일본이 서구열강의 주권위협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명백한 지도적 지위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전쟁과정에서 소요된 막대한 군비(17억엔)와 병사들의 희생(24만 명의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결과 배상금 조약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민중들은 히비야 공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전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막대한 국채를 발행했고 이것은 고스란히 민중들의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병제로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승전에 따른 물질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본민중의 분노에 불을 당겼던 것이다.<sup>14)</sup>

일본의 민중들이 전후처리 결과에 분노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일본적 내셔널리즘이 이제 지배계층 뿐만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내면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의 지속되는 전쟁들, 즉 홋카이도 개척, 류큐병합, 타이완 정벌,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병합 등 일본의 근대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아시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제국주의적 근대였던 것이다.

모든 제국주의 국가의 속성이 그렇지만 식민지라는 외부의 프런티어의 확대

14)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파주: 창비, 2009), 201-204.

는 수탈을 통해 확보된 국부를 내부로 돌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내부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온정적으로 대응하는 유화국면을 낳는 경향성이 있다. 다이쇼기의 일본의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한데, 러일전쟁 이후 일본경제는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시켰고, 이런 가운데 정치영역에 있어서도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민본주의는 물론 러시아 혁명 이후의 사회주의 사상까지 수용되는 등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가 도래한다.

1916년 일본의 계몽사상가인 요시노 사쿠조는 「헌정의 본의를 밝히고 그 유종의 미를 마치는 길을 논한다」라는 기념비적인 논의를 통해서, 입헌주의 정치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근본에 ‘국민적 교양’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주제와 공화제를 묻지 않고, 또 귀천 상하의 구별 없이 민중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것이 요시노 사쿠조가 강조한 민본주의(民本主義)다.<sup>15)</sup>

여기에서의 민본주의는 데모크라시(democracy)의 번역어인데, 요시노 사쿠조가 그것을 민주주의(民主主義)로 번역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미의 입헌주의 사상은 주권재민의 원리를 기본으로 삼지만,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일본의 메이지 헌법은 천황대권을 중심으로 성립된 흡정헌법이다. 만일 요시노 사쿠조가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천황의 군주주권(君主主權)에 대한 부정이 되기 때문에, 그는 표현은 민본주의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헌정체제 아래서 실현하기 위한 의회개혁, 보통선거권 운동, 국민적 교양의 육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의 요구로 이해될 수 있다.

천황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이 시기에 중요한 헌법 해석상의 논쟁이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도쿄대 법학부 교수였던 미노베 다츠기치(美濃部達吉)는 『헌법강화』라는 저작을 통해 이른바 ‘천황기관설’을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는 법률상의 인격을 가지며, 법률상의 주체인 국가가 주권을 가지게 되는데, 천황이란 국가의 최고기관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천황이 신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군주주권과 인민주권의 중간적인

15) 山住正己, 위의 책, 84.

형태로 국가주권을 주장하면서, 천황의 절대성을 상대화하고 정당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이었다.<sup>16)</sup> 천황을 현인신(現人神)으로 보는 당대의 관점에서 매우 급진적인 법 해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천황을 초월적인 국체(國體)로 보는 시각을 견제하는 논리였다. 미노베의 학설은 당대의 지식인과 정치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 논리와 결합되면서 정당정치·의회정치의 강화와 민중들의 보통선거권 확대요구와 맞물리면서 다이쇼 시대의 정치운동을 뒷받침하는 기폭제가 된다.

요시노와 미노베의 민본주의와 천황기관설 논의가 자유주의적 성격의 정치개량론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일본의 민중적 현실과 제국주의적 노선을 비판하면서 활동을 전개했던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도 존재한다. 고토쿠 슈스이(行徳秋水)라든가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같은 인물이 그들인데, 이들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비판하면서 노동자와 빈민들의 고통스런 현실에 주목하여 사회운동을 전개시켰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운동은 두 차원에서의 장애에 부딪혔다. 정부에 의한 탄압이라는 위로부터의 압력이 그 하나라면, 반대로 이들 자신이 연대하고자 했던 민중들과의 괴리라는 아래로부터의 배제가 그 다른 측면이었다. 가령 고토쿠 슈스이는 국체인 천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암살하려 했다는 이른바 ‘대역사건’으로 1911년 처형된다. 대역사건 이후에도 사회운동의 지향을 견지했던 오스기 사카에는 1923년 관동대지진 와중에 일본의 헌병에 의해 학살당한다.

다이쇼기의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민본주의를 통한 의회주의의 요구를 일면 수용하는 한편 25세 남성 보통선거권제를 실시하고, 교육과 문화의 측면에서도 ‘교양주의’에 기반한 다채로운 활동이 전개되었다. 일시적으로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고 사상적 측면에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운동이 활발해졌으며, 민중들 역시 1918년의 쌀폭동 이후 자신들의 요구를 사회운동의 형태로 제기하면서, 지식인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외형적 활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일본정치는 천황주권론의 강력한 자장을 벗어날 수 없었고, 1차 세계대전의 참전과 같은

16) 成田用一, 『大正デモクラシー』(東京: 岩波書店, 2007), 30.

전쟁을 통한 제국주의식민주의 노선은 오히려 강화되는 면모를 보였다. 교육에서는 국체(國體)의 명징을 강조하면서 천황에 대한 국민적 충성을 강조했고, 민중들의 경제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국외로의 계획이민이 국책으로 반복되었고 획득된 식민지를 통한 수탈경제는 변함 없이 지속되었다.

민중들 역시 한편에서는 1918년의 ‘쌀 폭동’을 통해 격렬한 저항을 보여주었지만, 1919년 조선에서의 3.1운동을 목격한 이후로는 국가주의와 결합된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농후해졌다. 이것이 명백해진 것은 1923년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사태에 일본의 평범한 민중들이 자경단을 구성해 관헌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가담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민중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제국의식’으로 표상되는 민족적 우월의식과 결합하여 국가주의로 회수되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 역시 1925년에는 천황제의 수호를 위해 ‘치안유지법’을 제정해, 국체(國體)의 변혁을 시도하는 사회운동·정치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도했으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봉쇄했다. 이는 일본에서의 민주정체의 형성가능성을 뿌리로부터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IV. 총력전 체제와 파시즘의 대두

일본에서의 쇼와(昭和) 시대는 군부 주도의 천황제 파시즘이 강화되어 급기야 15년 전쟁(1931-1945)으로 비화된 후 패전을 맞게 되는 전쟁과 침략의 시대였다. 1929년의 뉴욕발 세계대공황은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공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은 외부의 식민지를 더욱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는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의회정치조차 부정하는 군국주의 세력의 확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만선철도를 관리하고 있던 관동군은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이듬해 괴뢰국인 만주국(滿洲國)을 건국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를 만주국의 황제로 형식상으로 옹립시킨 후 실제로는 관동군이 만주국의 통치에 직접 관여한다. 만주사변이 일어날 당시 중국은 각 지역이 군벌세력에 의해 분할 통치되고 있던 혼란기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

가를 건설하기 위한 홍군과 국민당 군이 내전을 벌이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일본의 관동군과 조선군이 만주지역을 점령하고 만주국을 수립한 것의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색혁명 확산의 방어라는 명분이었지만 의도는 다른 데에 있었다.

군부 ‘혁신파’를 축으로 하는 다음의 공세는 3월 사건을 거쳐 1931년 9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감행한 대외침략전쟁이 된 만주사변으로서 개시되었고, 이 전쟁이 일본의 파쇼화의 발화점이 되었다. 군부 혁신파(이 경우 육군이 중심)가 기도한 구상은, 관동군 참모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의 구상을 예로 들면, 장래에 임하게 될 미국과의 결전을 목표로 하면서 당면한 중국의 통일과 자각한 대중운동의 발전을 저지하고, 소련에 대한 전략적 기반(중국 동북부의 기지화, 자원 및 시장의 탈취)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국 동북부(만주)를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 이 전과를 지렛대로 삼아 군부의 위신을 높여 국내의 정치체제를 전환시키고, 동시에 전쟁을 계속 진행시켜 일본의 자급적인 전쟁경제와 총력전 체제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sup>17)</sup>

위에서 군부혁신파라고 표현되고 있는 세력은 의회정치를 철폐하고 천황친정, 실제적으로는 군부지배를 획책하고자 했던 강경파들이다. 만주사변은 이들 강경파 군인들의 패권적 욕망과 재계의 공황타개에의 기대가 절묘하게 결합되어 나타난 사태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다른 도미노 식의 파국을 초래했다.

일단 일본의 만주침략을 국제연맹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만주국의 성립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통일과 대중운동의 발전을 저지한다는 일본의 목표와는 반대로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중국에서의 항일외지는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애초에 일본군부에 호의적이었던 장학량의 동북군벌조차 항일전쟁에 참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총력전 체제의 구축을 위해 만주국 뿐 아니라 화북지역에까지 침략을 지속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본토 전역으로 군사력을 전개하는

17) 高橋行八郎 외 2인 공편, 『일본근대사론』 (서울: 지식산업사, 1981), 299.

약순환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것이 이후 중일전쟁(1937)으로 전면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에 대한 항일항전을 더욱 거세게 만든 요인이었다.

가장 심각한 아이러니는 만주사변을 기회로 일본이 고립의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주사변과 만주국의 건국을 소련은 안보위협으로 간주했고, 영국과 미국 역시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고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군사력 전개를 자국의 이익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함으로써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외교적 고립일 뿐만 아니라, 경제공황기의 파국적 시장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심각하게 직면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런 와중에 일본 국내의 상황은 형식상의 입헌주의 사상조차도 부정되고 탄압에 직면하게 되는 파쇼화로 귀결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천황기관설의 주창자인 미노베 다즈기치의 학설은 천황에 불경을 범하는 반역사상이라는 이유로 지목되어 추방되었고<sup>18)</sup>, 반면 ‘국체명징운동’이라는 기치 하에 천황이 절대화되고 형식적이거나 존재했던 입헌주의가 완전히 부정되는 사태로 귀결되었다. 1937년에는 군부를 등에 업은 제1차 고노에(近衛) 내각이 성립되고 중일전쟁이 본격화장기화되는데, 1938년에 이르면 ‘동아신질서’라는 구호 아래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고립주의는 더욱 강화되게 된다.

일본 국내에서의 정치적 파쇼화도 심각해 문부성에 의한 국체명징훈령(1935), 치안유지법(1925)의 보완입법인 사상범보호관찰법(1936), 국가총동원법(1938) 등이 연이어 제정됨으로써, 형식적이거나 존재했던 입헌주의의 근간이 완전히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국가총동원법은 일제말기 파쇼화의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였다. 아래의 인용문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이 법(국가총동원법-인용자)은 인원, 물자, 시설, 자금을 비롯한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를, 통제를 통해 전쟁을 위하여 총동원하려는 법률과 세목을 일체 칙령에 위임함으로써 경제체제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정부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18) 高橋行八郎 외 2인 공편, 위의 책, 302.

법률의 성립은 다음과 같은 의의도 갖고 있었다.

첫째는, 경제통제에 관한 의회의 법률협찬권(法律協贊權)을 빼앗음으로써 메이지 헌법에 규정된 입헌주의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둘째로는 국가총동원의 필요라는 이유로 생활, 근로, 재산에 관계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셋째는, 모든 정당들이 일치하여 이 법안을 찬성함으로써 경합적 파소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sup>19)</sup>

국가 총동원법은 일본 내지(内地)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역 모두에 일원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치안유지법과 사상범보호관찰법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전시하의 초국가주의적 법률을 통하여, 천황으로 상징되는 국체에 반(反)하는 일체의 조직과 인사를 검거와해 전향시켰다.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이른바 입헌파, 민주파, 사회주의자들이 위로부터의 국가의 탄압에 직면하여 보여준 태도들에 나타나는 사상적 경향이다.

일본의 근현대사상사를 검토하는 연구자들이 기묘하게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일시적으로 급진적으로 폭발한 반국가주의적 사상이 국가의 탄압을 만나 전향하면 역설적으로 더 경직된 초국가주의로 치닫게 되는 반동형성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동형성의 배후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뿌리내린 아시아에 대한 멸시 의식이 끈질기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가령 옥중에서 전향선언을 한 두 공산주의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분석은 이러한 태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가 “국가권력의 압력을 받아 생기는 변질”이라고 말한 현상이다. 공포와 근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선언은 출옥할 때 나왔으므로 전향이 단지 공포와 근경의 결과로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두 공산주의자 사노 마나부(左野學)와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의 경우가 유명한 예이다. 1933년 이들은 일본의 경우에 한해 자신들의 신조 중에서 반제국주의의 신념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들은 일본이 서양 자본주의의에 대항하여 아시아를 지도하고 있으므로, ‘후진국’인 중국으로 팽창해서 대만과 조선의 경우처럼 만주를 일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옳다,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 독립과 민족자결권이란 관념

19) 高橋行八郎 외 2인 공편, 위의 책, 308-309.

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르주아 이념이다”라고 말하였다.<sup>20)</sup>

실제로 사노와 나베야마 뿐만 아니라 전향한 일본의 공산주의자들은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지도적 임무를 강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미에 대한 선망의 반동형성으로서의 새로운 멸시감을 표현하면서, 국가사회주의자로 전향하여 만주침략 및 중일전쟁,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을 정당화했다. 서구적 근대에 대한 일본적 콤플렉스가 아시아멸시와 서구선망에서 서구멸시로 이어질 때, 거기에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신국(神國) 일본에 대한 절대화된 나르시시즘을 구축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함으로써 개전된 이른바 태평양 전쟁은 중일전쟁 이후의 일본의 고립주의와 이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에 대한 극단적 타개책, 여기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표어 아래 기획된 일본의 망상적 세계전략의 결과로 나타난 전쟁이다.

일본은 모든 전쟁과정에서 이것이 도의적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중일전쟁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서구열강으로부터 아시아를 방어하는 ‘동아신질서’를 일본이 지도적으로 대변한다고 주장했고, 태평양전쟁에서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이 영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공존공영의 질서를 구축한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것이 남방과 북방 아시아 모두를 세력권으로 하는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쟁경제를 가동시키기 위한 원료와 에너지의 확보를 위한 침략전쟁이었다. 동시에 구미 자본주의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의 절망적인 결과로 자급적 전쟁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가진 것이었다. 당시의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의 3국동맹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권익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 시기에 이르르면 세계대전의 향방은 주축국이 아닌 연합국으로 넘어가 있는 실정이었기에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에 뛰어드는 셈이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본은 완전한 전시체제로 이행한다. 군관민 총력전의

20) W. G. 비즐리, 장인성 역, 『일본근현대사』 (서울: 을유문화사, 2004), 302-303.

태세는 더욱 강화되었고, 국가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의 ‘황민화 교육’은 일본과 식민지 모두에서 강제되었다. 이 시기의 교육은 『국어』, 『수신』, 『지리』, 『국사』 등의 이른바 ‘국민과 교과’를 통해, 황국사관과 국민동원을 더욱 노골화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일관되게 국가 및 천황을 위해 멸사봉공할 것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적인 황민화 교육이 국민총동원의 수단으로 강화된다. 정치 역시 기존의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대정익찬회(1940)라는 초국가기구가 성립됨으로써 전 시체제 하에서 국가주의에 반하는 모든 언설은 사라진다.

객관적 전환의 악화와 전력의 열세를 일본은 대화혼(大和魂)이라는 정신주의로 맞서 싸웠지만, 연합군의 파상적인 공세와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의 원폭공격 이후에는 사실상 전의를 상실했고, 일본의 돌격대 식의 근대가 끝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인해야만 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쇼와 천황 히로히토는 라디오를 통해 무조건 항복의 조서를 일본의 국민들에게 발신했다. 이로써 1868년 메이지 유신 이래의 일본적 근대는 연합국의 점령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흑선의 출현과 이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된 일본적 근대는 USS 미주리호에서의 항복조인 서명(1945. 9)으로 그 기나긴 막을 내리게 된다.

## V. 결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근대는 서구열강에 의한 개항요구로부터 시작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동아시아적 근대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몇 가지 차원에서 상기하게 된다.

첫째, 중세 봉건주의 체제로부터 근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역사적 경로의 난관이 그 하나의 문제다. 일본의 경우는 도쿠가와 혹은 에도막부로 상징되는 막번체제 하의 봉건제를 메이지 유신을 통해 변혁하고자 했지만, 오늘날의 상황에서 보면 그것은 유럽에서의 절대왕정 체제 혹은 아시아의 전제왕정 체제와 유사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국민국가가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천황제 절대왕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귀결되었기에 여기에 민주정체가 성립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본의 집권세력이 아시아에서의 ‘국제협력주의’를 간과하고 ‘아시아 열사’와 ‘서구선망’의 태도를 일찍부터 취했던 고립주의 노선, 즉 탈아입구(脫亞入歐) 전략의 구조적 한계를 들 수 있다. 메이지 유신의 초기 단계에서 일본이 취했던 서양 따라잡기 전략은 물질적·제도적 수준에서 일정한 근대화의 성취를 낳았다. 그러나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과 같은 아시아 제국에 대한 패권주의적 전략은 결과적으로 일본적 근대를 서구 열강에 의한 점령으로 귀결시킨 구조적인 계기이다. 중일전쟁의 장기화가 결국 일본의 패전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셋째, 일본이 ‘기술의 근대성’이라는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자본주의적 축적을 성취했지만, ‘해방의 근대성’이라 할 수 있을 사상과 정체 체제 아래서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상당 부분 억압하고 방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사를 극단적인 파국으로 내몰리게 했다고 판단된다. 특히 헌법제정 전후에 있었던 두 가지 가능성, 즉 메이지기의 자유민권운동과 대정 데모크라시 운동 과정에서, 정치참가의 권리로 요약되는 시민권을 봉쇄시키고 의회정치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한편, 천황대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태평양 전쟁기 ‘대정익찬회’로 상징되는 파시즘 통치체제를 형성시킨 근거였다.

넷째, 천황제라는 일본 고유의 관념이 근대에 이르러 만들어진 것에도 일본적 근대의 실패가 숨어 있다. 천황제 국가형태 아래서 시민은 존재하지 않으며, 민주주의 역시 기껏해야 민본주의라는 시혜적 온정주의로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전(戰前) 일본의 상황이었다. 시민은 부재하고 신민(臣民)만이 존재하였기에, 국체 관념이랄지 국가 신도랄지 하는 초국가주의적 유사 종교적 초월성이 일본의 근대 정치를 왜곡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전 일본의 서구 근대에 대한 대응은 기술적·제도적 차원에서는 서구 자본주의의 근대성을 빠른 속도로 모방·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가 축적된 물질 토대를 근거로 하여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던 것과는 반대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국가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해방의 근대성’에 있어서의 총체적 실패를 낳았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일본적 근대의 모순적 결과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정

치와 민주주의가 자민당 일당지배 체제와 같은 권위주의적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는 중요한 조건일 것이다.

- ▶ Submitted : 2016. June. 18
- ▶ Reviewed : 2016. June. 22
- ▶ Accepted : 2016. June. 26

## References

- Maeksegyesa pyeonchanwiwonhoe. 2015. Ilbonsa. Goyang: Neukkimiinneunchaek.
- W. G. Beasley, Jang Inseong Yeok. 2004. Ilbon geunhyeondaesa. Seoul: Eul Yoo Publishing Co., Ltd..
- 大野建一·坂野潤治. 2010. 明治維新 1858-1881. 東京: 株式會社 講談社.
- 木原憲夫. 2006. 民權と憲法. 東京: 岩波書店.
- 成田用一. 2007. 大正デモクラシー. 東京: 岩波書店.
- 高橋行八郎 Oe 2in gongpyeon. 1981. Ilbongeundaesaron. Seoul: Jisiksaneopsa.
- 牧原憲夫. 2006. 民權と憲法. 東京: 岩波書店.
- 山住正己. 1987. 日本教育小史. 東京: 岩波書店.